

단기적 환율 변동성 확대 전망 “헌재 판결 이후 제자리 찾을 것”

정치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트럼프 2기 통화정책 변수
“1410~1420원대 움직일 것”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당분간 환율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헌재 소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인 만큼 단기적 혼란이 예상된다. 환율은 헌재 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점차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 관측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비공개회의를 개최한다. 탄핵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숙의한다.

앞서 주식시장 등에서는 탄핵안 가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 됐던 만큼,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빠르게 상승한 환율의 조속한 안정대책이 예상된다.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6.20원에 야간 거래(오전 2시 종가)를 마쳤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 선포 직전

인 지난 2일 대비 29.70원(2.11%) 상승한 수준이다. 특히 긴급 계엄선포 당일(11원↑)과 1차 탄핵안 부결 직후(8원↑) 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 14일 국회가 2차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2차 계엄 가능성 등 정치적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환율은 당분간 변동성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앞선 탄핵 정국에서도 탄핵안의 국회 통과 직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직후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1.8원 올랐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통과 당시에도 환율은 하루 만에 7.4원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004년 3월 12일부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 같은 해 5월 14일까지 환율은 50원에 달하는 변동성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2017년 3월 10일까지는 80원 가까이 움직였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혼란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른 강 달러 추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 변

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원·달러 환율 상승 시점은 달라질겠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집권 1기 때보다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다”라며 “이는 원·달러 환율의 동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치 불안이 더 확대되지 않고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치적인 혼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대한 견제도 있는 만큼 일단 많이 내려가기보다는 1410~1420원대 수준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기간 환율 변동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로 환율이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탄핵안 통과 이후 헌재 판결 전까지 불확실성이 반복될 전망이다. 결국 완화 수순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계엄 가능성 소멸 등 정치리스크 완화 수순에 따라 2~3개월의 추가 변동성 이후 빠른 회복세가 기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AI 제도화 이미지

“AI 제도화 등 韓 첨단산업 재정비 기회”

IT업계, 시민단체 등 법안 정비 요구

제까지도 요구하기도 한다.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소추안 가결로 마무리 됐지만 인공지능(AI) 기본법의 연내 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현 AI 기본법이 본회의 통과 일정이 불투명해진 만큼, 법안의 부족한 점과 주요 문제점을 새롭게 고친 새 입법을 낼 기회로 보고 있다.

15일 <메트로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상정될 예정이었던 AI 기본법이 탄핵 정국을 맞아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다시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에서 대폭 수정한 새 법안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의 개발·활용·산업육성·악용 등 여러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토대가 될 기본법안이다. 현재 심사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 앞까지 간 AI 기본법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해 108인이 공동발의한 안이다. 국민의힘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또한 관련 법안을 4건 발의했으나 심사소위를 넘진 못했다.

대표적으로 법안에 대해 제기 되는 문제는 이용자의 안전과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금지된 AI 기술 규정 미기재 ▲고영향 AI 범주 협소 규정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이행 강제를 위한 제재 규정 미비 ▲이용자 권리 및 구제방안의 부실성 ▲AI 감독을 위한 독립적 감독기관 부재 등이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방 또는 국가안보 목적의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 적용 배제 조항의 삭

제까지도 요구하기도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AI 기본법이 산업 발전에 치중돼 위험성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며 관련해 국회 국방위 통과 AI 법안 시민사회 입법건의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에서는 또다른 측면에서 보완점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771개 회원사는 주요 국회의원들에게 ‘AI기본법 지지 및 건의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세제 혜택, 펀드 조성 및 데이터의 개인 권리 보호와 공정한 이익 분배 체계 확립, 경제 생산성 혁명과 산업적 성장 등 산업 성장을 위한 내용을 추가로 제시했다.

IT 업계에서는 AI 기본법에 담긴 가장 큰 문제를 법안 실효성 여부로 보고 있다.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AI 기술에 발맞춘 법안이기 보다는 이미 지나간 기술에 대한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무의미 하다고 평가 받는 조항은 AI 생성물 확인을 위한 워터마크(식별표시) 삽입 명시다. 이미 식별표시 삽입 방식과 데이터 교란 방식 등 최근 1년 내 AI 생성물 표시 대책으로 대두됐던 기법이 모두 파괴된 상태인데 뒤늦게서야 무의미한 기술을 거론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업계에서 AI 기본법에 대한 추가 보완점을 계속 내놓고 있다”며 “현재 AI 기본법이 법사위까지 올라가지 않은 상태인 만큼 업계 내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AI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

원전·시추 등 尹정부 주요 산업정책 ‘안갯속’

원전 전기본 국회 통과 미지수
대왕고래 프로젝트 좌초 위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 표가 붙은 주요 산업정책에도 불뚱이 될 지 우려가 나온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치적으로 삼으려던 산업정책은 국내 신규 대형원전 건설, 체코 신규원전 수출과 동해 대왕고래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등이 꼽힌다.

우선 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뒤집으며 원전 생태계 복원과 국내 신규 대형 원전 3기 건설부터 불투명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마련, 2038년까지 최소 3기의 신규 대형 원전을 건설하고, 2035년부터는 첫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가동하기로 하고, 이달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배제되면서 원전 신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게 됨에 따라 원전 전기본이 국회 보고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11차 전기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체코 신규원전 사업의 경우, 한미 양측 정상외교가 차질을 빚을 경우, 한국 수력원자력과 미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첫 시추를 진행할 노르웨이 업체 시드릴사 소속 드릴십인 ‘웨스트 카펠라호’가 지난 9일 오전 부산 영도구 외항에 정박하고 있다. /뉴시스

것이라 평가가 나온다.

한-체코 양국은 체코 신규 원전 본계약을 내년 3월 체결할 예정이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자사 기술을 활용한 원전 수출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지난 11월 ‘원전 수출 원칙에 관한 기관간 MOU’에 가서명하며 양측 분쟁에 긍정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시 “(MOU가) 현존한 이슈를 해결할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갈등 해소)유도하고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MOU 최종 서명이 안된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한국은 대통령 부재 상황에 놓이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삭

아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며 야당을 비난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에 나선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야당의 반대 속에 첫 탐사시추 예산이 전액(497억원) 삭감되며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가 비용 1000억원 전액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첫 탐사시추 작업을 할 웨스트 카펠라호는 현재 부산외항에서 시추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오는 17일 출항해 20일경 동해 유망구조 해역으로 이동해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시추 가능성이 불투명한 반면, 비용부담이 큰 대왕고래 프로젝트 자체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첫 시추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오지 않는한 차후 시추계획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법안 최대한 처리”

▶▶ 1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서 계속

해당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게 된다.

또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와 항공·해운물류 분야에 이어, 석유화학·건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바로바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다. 또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고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계엄령 여파로 표류 위기에 처했던 ‘2025년 경제정책방향’도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우리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산업의 명운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 대외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잇따라 개최해, 경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혼란한 상황 속 대응책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